

민주주의 사상과 적폐청산



성기진 박사 (포에시스 대표)

캐나다 UBC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퀸즈대학교에서 정치철학과 과학기술학(STS)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라브리공동체에서 연구, 강의, 기독교세계관학교 기획 및 운영 등으로 봉사했다. 현재 대전에서 보통 사람들을 위한 IT 컨설팅 기업 '포에시스'를 운영하고 있다.

탄핵 정국과 대선이 끝나고 겨우 숨을 돌리려는 찰나, 어감부터 심상치 않은 “적폐”라는 낱말이 혜성처럼 나타나 대한민국의 화두를 장악했다. 서로 적폐라고 손가락질해대는 통에 웬만한 사람이나 사회 구조는 모두 “적폐”가 되었고 청산 대상이라는 빨간 딱지가 붙었다. 이전 정권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면서 치워야 할 쓰레기를 많이 발견한 것은 사실인데, 치우다 보니 눈에 밝히는 먼지가 너무 많아 봄맞이 대청소가 겨울까지 이어지는 모양이다.

청산(清算)과 숙청(肅淸)은 맑을 청 자를 공유하지만, 하나는 쉼 산 자가 들어가고 다른 하나는

엄숙할 숙 자를 쓴다.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이 북한의 숙청과 다른 점은 최고지도자의 기분이 아니라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법에서 규정하는 죄에 대한 명확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사 의도나 범위에 대한 논란은 있을지언정 수사 대상이 실제로 나쁜 짓을 했다는 점에 의문을 품는 국민은 많지 않다. 프랑스의 리솔리의 추기경은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이라도 여섯 줄의 글만 가져오면 사형에 처할 죄목을 찾는 데 충분하다는 말을 남긴 바 있다. 하물며 썩을 대로 썩은 우리 정치권에서 누구를 수사한들 먼지나 지 않을 리가 없다. 수사망을 빠져나가려고 더 많

은 죄를 짓는 사람, 압박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 정치보복이라고 길길이 날뛰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김영삼 정부는 사정(司正)이라는 이름으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리를 수사했고,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부정부패를 파헤치는 데 열을 올렸으며, 이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깃발을 걸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관련자들을 뒤쫓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있어온 일이다. 5~10년 후에는 또 누군가가 문재인 정부의 꼬투리를 잡으려 할 것이 뻔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간판을 바꿔대는 정당들의 일방적인 주장과 감정적 어필에 휩쓸리기 쉬운 이때, 우리는 이렇게 반복되는 역사를 기억하고 민주주의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 대해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곤 하는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이 근대 정치사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며 기독교 세계관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 보려고 한다.

종교개혁의 유산

일반 대중 또는 대표자들의 참여와 투표로 의사를 결정하는 시스템은 소크라테스 시절의 그리스나 한국의 고대 부족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역사가 깊다. 견제와 균형, 법치와 인권 존중 등을 강조하는 근대의 민주주의는 1215년 영국의 귀족들이 왕의 독단을 제한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규정한 <마그나 카르타>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시스템이 유럽의 몇몇 나라에 실제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종교개혁 이후인

17~18세기이다. 하나의 종교만을 따르던 세상에서는 왕이나 성직자의 말에 아무도 감히 토를 달 수 없었지만, 양심의 자유가 허용되고 나니 서로 다른 정책을 지지하는 세력들 사이에 비폭력적으로 의견을 조율할 방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수결로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 핵심은 아니다. 혁명과 내전으로 얼룩진 시대에 탄생한 근대 민주주의 사상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서로를 견제함으로써 어느 한 쪽이 독주하거나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 더 컸다. 삼권 분립을 확립하여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대립하게 했고, 지도자들은 선거를 통해 정기적으로 재신임을 받아야 하게 되었다. 선거를 자주 하기도 무척 어렵던 시절에 임기 제한을 요구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선거는 어떤 역할을 맡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나 집단을 선택하는 절차이기도 하지만,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나 집단으로부터 권한을 회수하는 절차이기도 한 것이다. 과거에도 투표로 왕을 옹립한 사례는 있었으나 한 번 왕이 되면 죽을 때까지 신하들의 재신임 따위는 필요하지 않았다. 따라서 절대왕정과 민주주의의 가장 큰 차이는 투표로 지도자를 뽑는다는 것이 아니라 투표로 그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점이라고 볼 수도 있다. 영국의 정당 정치 역시 1688년 토리당의 지지를 받던 제임스 2세를 휘그당이 폐위시킴으로써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우리도 체감했듯이, 이것이 매우 파격적인 발상이라는 데는 그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폐위된 제임스 2세는 가톨릭 신자였다. 명예혁명 이후 휘그당은 프로테스탄트 국가를 선언하여 다시는 가톨릭이 영국의 왕위를 넘볼 수 없도

록 만들었다. 이 때 휘그당의 사상적 지주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근대 민주주의의 아버지 중 한 명인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 잉글랜드 철학자)이다. 로크의 주장에 따르면 정치 지도자는 오직 국민의 동의를 통해서만 권력을 얻을 수 있으며, 한 번 얻은 권력도 오남용이 드러나면 언제든지 빼앗을 수 있다. 30여년 전 사회계약론을 처음 제시한 토머스 홉스(Thomas Hobbes, 1588-1679, 잉글랜드 철학자)와 달리, 로크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타락하는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에 처음부터 안전장치를 염두에 둔 것이다.

로크의 정치철학은 어떤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도 인간의 타락을 원천봉쇄할 수는 없다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허용된 행동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순간순간 자신을 살피고, 죄라는 암덩어리가 발견되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과감히 도려내는 과정을 반복해야 할 뿐이다. 이것은 기독교가 강조하는 인간의 죄성과 끊임없는 성화(聖化)의 필요성과 일맥상통하며, 부패한 가톨릭 교회를 박차고 나온 종교개혁자들의 경험과도 잇닿아 있는 주장이다. 개혁된 교회가 항상 개혁되어야 하듯이, 혁명 이후의 영국에도 휘그당의 독재가 아닌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했다. 왕도, 종교 지도자도, 심지어 쿠데타를 준비하는 자신들도 한낱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믿었기에 다음 선거에서 얼마든지 패배할 수도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주장할 용기를 얻었을 것이다.

본질을 떠난 민주주의

영국에서 시작된 근대 민주주의는 미국과 프랑스를 거쳐 전세계로 퍼져나갔다.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독재국가마저도 공식 명칭에 뽀뽀하게 민주주의라는 글자를 새겨넣을 만큼 모든 나라는 당연히 민주주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종교개혁이라는 배경에서 멀리 떨어진 만큼, 현대의 민주주의는 지속적인 견제와 낙선의 위협으로 인간의 죄성을 가능한 묶어 둔다는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그 자체로서 낭만화되고 우상화되어 가고 있다.

C.B. 맥퍼슨(C.B. Macpherson, 1911-1987, 캐나다 정치학자)에 따르면 정치 지도자들의 횡포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던 초창기의 “보호적 민주주의”는 19세기의 경제 발전과 문화 융성에 힘입어 국민 각자의 자기 계발과 풍성한 삶을 보장하는 데 집중하는 “발전적 민주주의”에 길을 내주었고, 20세기가 되자 선거는 형식에 불과하고 여러 이익집단들이 번갈아서 권력을 적당히 나눠갖는 “균형적 민주주의”로 변질되기에 이르렀다. 참여한 견제는 사라지고 산술적 균형만 남은 것이다. 맥퍼슨은 1970년대의 시민운동과 함께 대안으로 떠오른 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에 희망을 걸었지만, 자신과 타인 모두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이념만 옳다고 주장하는 참여민주주의는 떼쓰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참여민주주의 실천에 앞장서는 운동가 중 많은 분들은 훌륭한 목표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그들 중 상당수가 알게 모르게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 무척 낭만적인 인간관을 갖고 있다는 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한다. 경제 구조를 왜곡하고 비리를 저지르며 환경을 파괴하는 “그 누군가”만 사라지면 나머지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에는 한편 사람에 대한 애정과 희망이 묻어 있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근대 민주주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서로 협력할 준비가 이미 잘 되어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시스템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타락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더러운 세상, 이론을 정립하는 학자 자신마저도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나마 많은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현실적인 제안이며 절박한 타협안이었다.

민주주의가 지금처럼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자리잡은 것은 죄 많고 이기적인 인간성을 철저히 인정하면서도 그 이기심을 적절히 활용하여 정치인들 사이에 경쟁을 불입으로써 더 큰 선을 이루려 한 덕분이다. 이것을 잊고 자기계발이나 경제 발전 등 민주주의의 부산물에만 관심을 갖거나, 선거나 참여 등의 절차를 이상화한다면 형식적인 투표, 형식적인 법치가 다수의 횡포, 가진 자의 폭력으로 변질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자발적 협력을 낭만화하고 견제와 균형을 소홀히 하는 것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도 마찬가지이다. 정교분리를 중시하는 존 롤즈(John Rawls, 1921-2002, 미국 정치철학자)의 자유주의 이론과 현대의 급격한 세속화에 영향을 받은 숙의민주주의의 주류 이론은 참여자들 사이에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무척 중시하고, 합의를 이룰 수 없거나 공론화하기 불편한 주제는 아예 민주적 의사결정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단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

다는 이유만으로 낙태나 안락사 등 그리스도인들이 중시하는 이슈들에 국가가 개입하기를 피하는 결과를 낳고, 더 나아가 본지 12월호에서 다루었던 공적인 자리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조차 꺼리는 최근 미국의 트렌드와도 발을 맞추고 있다. 논리적 분석이 곤란한 명제는 논의하기조차 거부하던 20세기 초의 분석철학이 간판만 바꾸어 다시 나타난 것 같은 인상을 받는 것은 왜일까? 인간의 이성을 맹신하던 철학자들이 인간의 선함 역시 과대평가하는 것 같다.

불편한 민주주의

위에서 보았듯이 근대 민주주의의 핵심은 선거라는 절차나 다수결의 법칙 따위가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통해 죄 많은 인간의 통치를 그나마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는 의도였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는 적법절차도 중요하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로부터 촉발된 일련의 사건들을 보다 큰 틀에서 이해하려면 특정 진영의 논리나 특정인에 대한 감정에 휘말리기보다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자신이 틀렸을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또는 보기를 거부하는 것은 무언가나 누군가를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일수록 쉽게 빠지는 유혹이다. 이런 개인들이 모여 집단을 이루면 그야말로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된다. 집단의 중심이 되는 신념이나 지도자에 대한 도전이나 지적이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합리적 비판이 아닌 인격모독으로 받아들이고, 조금이라도 의견이 다르면 적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적폐청산이라는 핑계로 정치보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에는 사람의 이런 연약함도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은 김영삼 정부가 사정에 열을 올리던 시절에도, 이명박 정부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의 비리를 파헤치던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있었다. 자기들이 권력을 갖고 있을 때는 문제삼지 않았기에 당연한 일이다. (자신의 범법행위를 스스로 문제삼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그렇게 심각한 범법행위를 저지르지도 않을 것 아닌가?) 인간은 죄가 많고 이기적이기에, 기득권층의 악행은 그 사람이 기득권을 빼앗긴 후에야 제대로 조사할 수 있다. 이런 사안에 대한 수사과 판결은 정치보복의 모양을 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사하는 사람들도 죄인의 본성을 떨쳐버릴 수 없기에, 적폐청산이라는 대의명분과 정치적 실리와 사적인 보복 심리가 뒤섞여 있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적폐청산이나 정치보복이나 하는 논쟁은 소모적이다. 인간의 추악함을 기억한다면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구체적인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수 있으나, 범죄 의혹이 있다면 수사와 재판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피해자에 대한 애뜻함이 한 경찰관의 수사 열의에 도움을 줄 수 있듯이, 경쟁자에 대한 보복 심리 역시 누군가는 해야 할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인간의 추한 본성마저 변화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민주주의의 힘이고,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이러한 발상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온 것이다.

종교개혁 정신의 영향을 받아 확립된 삼권분립이라든지 적법절차,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은 번거롭고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번거로움과 비효율성은 권력을 가진 자가 함부로 행

동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어리석음이다.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국회가 법안을 날림 처리하거나 수사 기관이 영장 없이 국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면 꼭 탈이 나지 않던가? 민주주의는 선거날 30분만 투자하면 알아서 돌아가는 기계도 아니고, 가장 무난하고 광범위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속의민주주의자들을 만족시킬 만큼 차분하고 잘 정돈된 시스템도 아니다. 민주주의는 일부러 요란하고 불편하고 짜증스럽게 설계된 시스템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지금 이 사회가 과연 정의로운지를 끊임없이 재확인하지 않으면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죄로 가득차 있기 때문이다.

수사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종종 영장이 기각되기도 하며 거리에서는 시위가, 법원에서는 재판이, 언론에서는 각종 추측성 보도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서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한편으론 무척 지치는 일이지만, 지도층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 사회의 뇌리에 단단히 각인시키려면 이를 악물고 감수해야 할 불편이기도 하다. 사적인 자기계발이나 형식적인 선거 참여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런 난리법석에 어느 정도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부조리한 사회를 개혁하는 것은 정권이 바뀐 직후뿐 아니라 언제나 해야 할 일인데, 한동안 이를 소홀히 했으니 결국 자업자득이다.

그러나 지난 정부가 잘못된 것이 아무리 많더라도 적폐청산의 총대를 메고 있는 현 정부나 대통령 개인을 지나치게 옹호하거나 이상화하는 열성팬들 역시 경계해야 한다. 자기들의 욕심과 부족함은 생각하지 않고 경쟁자들의 적폐를 파헤치는데만 집중한다면 다음 정부에 의해 똑같이 당할 것이

기 때문이다. “재도 나쁜 짓 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는 유치한 핑계가 통해서는 안 된다. 다음은 재 차례다. 인간의 죄 때문에 권력자들에게 항상 공평하게 법을 적용하기 힘들다면 번갈아서라도 상대방에게 적용하도록 하고, 연약한 인간의 욕심과 보복 심리마저 더 큰 선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근대 민주주의의 놀라운 지혜이다.

앗시리아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바빌론을 통해 유다와 앗시리아를, 페르시아를 통해 바빌론을, 그리스를 통해 페르시아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자. 그 중 어느 누구도 다른 이에게 먼저 돌을 던질 만큼 깨끗한 나라는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그들을 사용하셨고 쓸모를 다한 후에는 헌신짝처럼 버리셨다. 한 나라의 역사는 한 정치인이나 정당보다 크고, 하나님의 역사는 한 나라의 역사보다 크다. 그분의 섭리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겸손과 회개, 끊임없는 자정 노력뿐이다.

결론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금은 더 선호하는 정치인과 정당이 있다. 자신이 선호하는 정치인과 정당이 권력을 얻게 되면 반갑고, 수세에 몰리게 되면 불안한 것이 당연하다. 지금처럼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과 외부의 위협이 극심한 상황에서는 자신과 비슷한 입장을 대변하는 계파의 흥망성쇠를 더욱 다급한 문제로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정치 이슈를 이념 투쟁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잠깐의 득실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발전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공기청정기 필터를 한두 번 거치는 것으로 미세먼지가 모두 걸러지지 않는지만, 계속해서 필터에 공기를 불어넣으면 몇 시간 후에는 좀 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 물론 필터도 종종 갈아주어야 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자꾸만 실내로 유입되는 새 먼지도 열심히 닦아내야 한다.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동경하는 선진국의 민주주의도 수백 년간 이런 과정을 거치며 깨끗해진 결과일 뿐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도 그 과정을 똑같이 거치며 연단되는 것 밖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기억하며, 그 길고 어두운 터널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손수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